

2025년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(융합탐색)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「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」의 2025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7월 1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경찰청장

- 목 차 -

1. 사업개요
 - 가. 사업 목적
 - 나. 사업 필요성
 - 다. 사업 내용
 - 라. 공모방식 및 지원 내용
 - 마. 사업추진체계
2. 신청 자격 및 제한
3. 신청 기간 및 방법
 - 가.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
 - 나. 신청 방법
4. 선정 절차
 - 가. 평가 방법
 - 나. 평가 절차
5. 신청 시 유의사항
6. 기타사항
7. 향후 일정
8. 문의처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 목적

- 중장기 불확실한 미래치안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치안 분야 내 창의적·도전적인 기술개발 지원

나. 사업 필요성

- 신기술의 발전과 생활 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예기치 못한 치안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. 이를 해결하기 위해, 과학적 분석과 대안 도출에 기반한 과학치안을 통해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.
- 이에 따라, 치안 분야에 특화된 미래지향적 융합·탐색 연구를 지원하고 심리적·경제적·사회적·생태학적 범죄 영향 요인들과 新기술 간 상관관계 분석 등 다면적 연구 추진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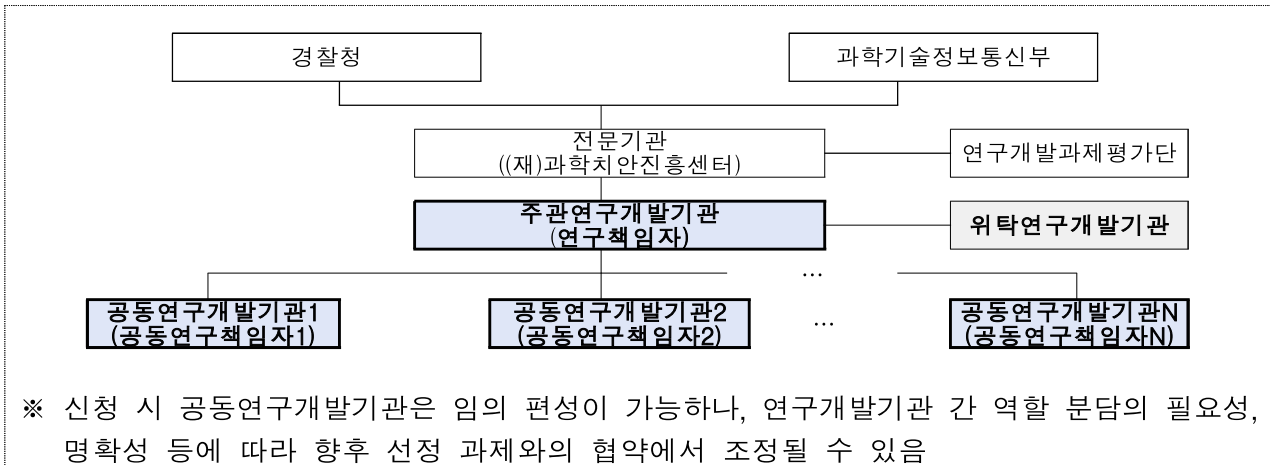
다. 사업 내용

- (융합탐색 연구)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융·복합 탐색연구 지원(단년)
 - ※ RFP별 상세 지원 내용은 [첨부1~6] 확인

라. 공모방식 및 지원 내용

- (개요)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(융합탐색) 6개 과제 지정공모 및 선정 추진
- (지원규모) 총 6개 과제, 총 4.8억 원 이내
 - ※ 과제별 지원 규모 상이
- (지원기간) '25. 8. ~ '26. 1.(6개월)
 - ※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

마. 사업추진체계



2. 신청 자격 및 제한

※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(공동) 및 소속기관이 아래 기재되어 있는 신청 제한사항 등을 위반 시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해당 과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 또한, 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되어 선정 취소 가능함.

- (신청 자격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- 단,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※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 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), 제3조(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) 및 제4조(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)에 따른 **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** 과제 신청 시 **필수 제출**

- (**과제수 제한**)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,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

※ 단, 금번 공고되는 과제(6개)의 경우 기획연구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3책5공 연구개발과제에 포함되지 않음(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)

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
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
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
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제5조제1호·제2호의 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4의2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5.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- (**참여 제한**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
시행령 제59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(이하 "참여제한"이라 한다)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(이하 "제재부가금"이라 한다)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(이하 "연구개발비환수"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**(과제구성 제한)** 동일 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
 - ※ 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(혁신법 매뉴얼 준용)
- **(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)** 주관연구책임자 25% 이상(필수),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참여율 조정 가능
- **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(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해당 항목)**
 -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나,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, 연구비 회수/환수 및 제재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[공통 사항]

- ☐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, 지원대상 분야(과제),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☐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(단체)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
- ☐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
- ☐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☐ 참여제한 여부
 - 참여기관, 참여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☐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
 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,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
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)

[기업만 해당(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]

- ☐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
 -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**부도**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
 -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**체납처분**을 받은 경우
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)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**채무불이행자명부**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**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**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

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-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
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)인 기업 또는
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
'BBB'이상인 경우, ②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'BBB'이상인
경우 또는 ③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
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
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④「산업기술혁신사업
공동운영요령」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)
 -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
 -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
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-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
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
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
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
○ (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)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
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이며,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
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
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
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
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- 주관연구기관 책임자는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
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해야 하며,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
공동기관의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가.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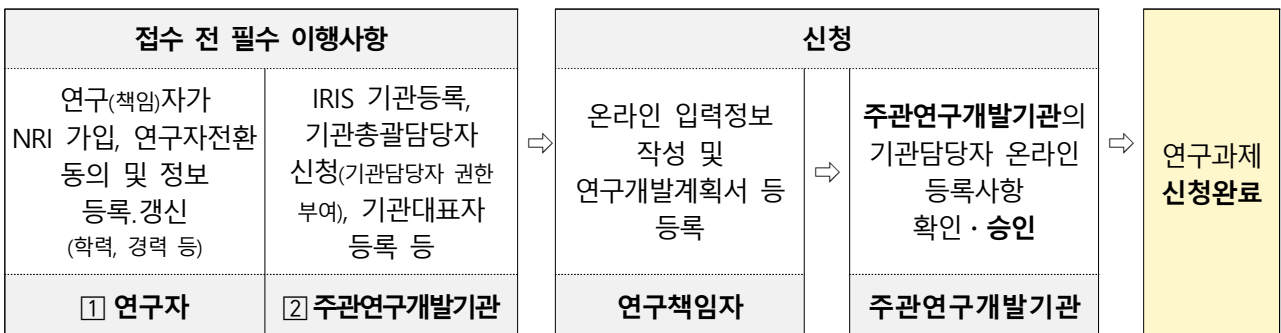
공고 기간	신청 기간(iris.go.kr)
'25. 7. 1.(화) ~ '25. 7. 30.(수) 15:00	'25. 7. 4.(금) ~ '25. 7. 30.(수) 15:00 ※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시와 주관연구개발 기관(기관담당자) 검토·승인 기간은 동일함

※ 접수 결과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, 해당 과제에 한하여 7일 내외 연장 공고를 할 수 있음

※ 신청기관의 수가 1개인 과제의 경우, 평가접수 기준을 상향하여 절대평가 하거나, 재기획 후 공고 추진할 수 있음

- 통합업무포털서비스(IRIS) 상 접수한 연구계획서가 “**기관담당자 제출 승인**” 상태로 표시되어야 **최종 신청 완료된 것임**

※ 기관담당자 승인 이후 신청 마감 당일, 전문기관(과학치안진흥센터) 반려 요청은 시스템 과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처리하지 않음



※ 세부 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 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 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- 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신청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[관련 문의(IRIS 문의처)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]

- 기간 내에 신청 완료(연구자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)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(유효성 검증 오류 등) 신청 마감일 최소 2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나. 신청방법

- (온라인 접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iris.go.kr>)을 통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완료

IRIS 시스템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

- ▶ **접수방법** : www.iris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우측 QUICK LINK → R&D업무포털 → 과제접수 → 신청공고 목록에서 '2025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(융합탐색)'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

※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<http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R&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접수 유의사항

- 온라인 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**[최종확인]** 후 **유효성 여부를 점검** → 유효성 오류 발생 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, 이후 **[최종확인]** → **[제출]**을 클릭하면 연구개발계획서가 제출됨(**[제출]** 이후 수정·삭제 불가, 이후 **주관연구개발기관(기관담당자)승인 필요**)
- 오류 수정은 1일 이상 소요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접수마감 최소 2일전 **[최종확인]** 진행 권장
- 연구책임자가 **[제출]** 버튼을 클릭한 후 반려 및 승인 권한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음(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에 연락하여 검토·승인 요청해야 함)
- **[제출]** 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[반려]를 받고, 계획서 수정 후 다시 **[최종확인]**하여 **[제출]**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
- 주관연구개발기관 **기관담당자가 [승인] 완료한 과제를 [반려] 받고자 할 경우에는** 과학치안 진흥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반려 권한이 있으므로 (070-4066-2478)로 요청해야 함. 다만, 신청 마감일 당일 반려 요청은 시스템 과부하 등의 우려가 있어 반려 처리하지 않음

- ▶ **제출서류** : www.iris.go.kr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 → '2025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(융합탐색)' 신규과제 공고에서 필수 제출 양식 확인

구분	제출 서류	비고
필수 (공통)	· 연구개발계획서	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(IRIS 업로드)
	·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	
	·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	
	·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	
필수 (기업)	·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	-
	·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
	· 기업유형 증빙자료	대기업/중소기업/중견기업
해당시	· (공통)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	온라인 제공양식 참조
	· (기업)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	
	· (공통)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	
	· (기업)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	한국연구산업협회 신청, 채용 증명서류 등

4. 선정절차

가. 평가 방법

○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

- 「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온라인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
※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나. 평가 절차

① 공고·접수	② 사전검토	③ 선정평가	④ 평가 결과 검토	⑤ 연구개시
공고(30일) 및 접수	접수과제 검토	전문가 평가	평가결과 종합/보고	선정통보 및 협약체결
경찰청, 과학치안 진흥센터	과학치안 진흥센터	연구개발과제 평가단	과학치안 진흥센터	과학치안 진흥센터, 연구개발기관
'25. 7. 1. ~ 7. 30.	'25. 7. 30. ~	'25. 8. 1주	'25. 8. 1주	통보) '25. 8. 2주 협약) '25. 8. 4주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① 공고 및 접수

- 경찰청, 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(30일 이상) 및 접수

② 사전 검토

- 전문기관이 신청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자격, 신청서식, 민간기업의 참여 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

③ 선정평가

- (평가위원) 분과별 6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
 - ※ 평가대상 과제 규모, 연구 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, 주제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가능
- (평가방법) (필요시)서면, 대면 평가
- 필요시, 대면 평가 전 전문가 서면평가 등을 통해 지원 규모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 과제 선정 가능
-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, 세부 평가계획은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

※ 발표 자료는 접수 시 '기타첨부자료'에 제출(PDF 권장)하며,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

※ 8월 1주 평가 개최 예정이며,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IRIS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및 문자로 안내 예정

- 평가항목 및 지표(안)

평가 항목	평가 지표	평가 배점
연구개발 목표 및 이해도 (30)	RFP와의 부합성	15
	치안현장과 국민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도	15
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(30)	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: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, 예산, 일정 등 계획의 구체성	10
	연구 수행 절차·방법의 적절성 : 수행 방법·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, 연구추진 일정의 적절성	10
	연구개발 추진의 창의성 : 새로운 연구방법론과 연구 체계 도입, 다학제간 융합 시도 등	10
연구수행 역량 (40)	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·관리능력 및 관련 연구경험	20
	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환경의 수준	10
	참여연구진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절성	10
합 계		100

※ 상기 평가 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

④ 평가 결과 검토

- 평가위원(전문가)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)
- 평가 결과 검토 과정 및 선정 후에도 신청자격, 허위사실이 기재된 접수자료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⑤ 선정 과제 공고 및 협약

- 선정결과 통보(과학치안진흥센터 홈페이지/개별 통보) 및 이의신청 접수·검토

<참고> 선정평가 결과 이의신청 가능 범위(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p.20)

-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- 연구개발과제(연구업적 등)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
-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
-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
 - ※ 연구개발과제평가단·평가위원 선정, 연구비 결정, 평가규정, 평가방식(상대·절대·혼합, 서면·토론·발표, 블라인드, 평가단계 등)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

-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

- ※ 협약 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선정 통보된 직후부터 협약을 위한 제반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함
- ※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는 평가 의견, 부처 및 전문기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음

5.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 마감 1~2일 전까지 접수 완료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을 권장하며, 신청 기간 내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까지 미완료 시 별도 구제 불가(접수 유예 없음)
- 신청 자격 적정성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, 32조 1항 등에 따라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
 - ※ 예: 주관연구책임자의 참여율 허위 작성, 2년 연속 부채비율 500% 초과 등
 - ※ 단, 참여 제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
-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원활한 연구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책임자 외 기술적(행정적)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을 전담인력으로 필수 지정(해당인력의 연락처를 연구개발계획서 1페이지 '실무담당자'에 반드시 추가)
- 평가위원회 및 전문기관(KIPoT) 의견 등에 따라서 선정 후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
-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 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- 연구비 활용 제한
 - 연구개발비 편성 시 간접비 10% 초과 계상 불가
- 본 과제의 **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**이며, 참여기업의 **민간부담 연구개발비 면제**

<참고> 참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관련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)

제19조(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)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.

1.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

6. 기타 사항

- (인건비)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다음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
[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 제65조제4항, 제7항]

-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
1.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**신규로 채용**하는 참여연구자(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**6개월 이내**인 연구자를 포함한다)
 2.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**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**
 3.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
 4.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
 5.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
 6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
- ⑦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※ 영리기관이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기업 및 대기업(중소기업,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)

-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**전문연구사업자**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

연구산업진흥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구산업”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 - 가.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
 - 나. 연구개발 기획,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,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·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
 - 다.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·유지·보수하는 산업
 - 라.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

제6조(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)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.

※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제출 필수

- 중소기업·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**신규로 채용**하는 참여연구자(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)

※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및 채용 증빙서류 제출 필수
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
- (관련법령)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령,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, 혁신법 관련 행정규칙

관련 법령 등 조회 방법 :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 → 법, 규정, 규칙 확인 →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클릭 → ‘공통 법·규정’탭 관련 사항 확인

- 관련 법령,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과 과학치안진흥센터의 유권해석에 따름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
7. 향후 일정

- 공고기간 : '25. 7. 1.(화) ~ '25. 7. 30.(수) 15시까지
(신청(접수)기간 : '25. 7. 4.(금) ~ '25. 7. 30.(수) 15시까지)
- 선정평가 : '25. 8. 1주 (8월 5일경)
- 선정결과 통보 : '25. 8월 2주(8월 12일경)
- 협약체결 및 연구 개시 : '25. 8월 4주
※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8. 문의처

- (재)과학치안진흥센터 사업기획팀
 - 전화 : 070-4066-2478 / E-mail : noro@kipot.or.kr
-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)
 - IRIS 콜센터(1877-2041)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첨부 1

테러·재난현장 가시화 기술 확보 방안 연구

		RFP 번호	유형①-1
과제명	테러·재난 현장 가시화 기술 확보 방안 연구		
과제담당관	미래치안정책과	담당자	임현진 경위
선정방식	지정공모형		
연구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테러 및 재난 상황에서 임무 연속성 확보 및 작전 현장 인식 개선을 위해 다중의 통신 모드를 통합한 통신기와 안전 현장 가시화 도구 확보를 통한 '보이는 현장' 구현 방안 연구 ○ 안전 현장 지휘·관제 시스템을 지능화하고, 이동형 지휘·관제·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연구 		
연구 내용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테러·재난현장 가시화 기술 관련 동향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정책·제도 및 시장 동향·전망 분석 -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(기술수준, 특허·논문동향 등)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 기술 동향의 한계점 도출 및 이후 본 연구추진 방향과의 차별성 제시 - 既추진 유사사업·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도출 - 기술 확보 당위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분석 - 국산화, 기술 확보에 따른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○ 안전 현장 요원 휴대형 다중통신단말 및 가시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기술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향(안) 연구 - 극한의 상황에서 통신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다중 통신 모드(위성통신, 6G, TVWS, PS-LTE, MANET 등)를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는 단말기 구조(통신 모드 전환 및 제어를 위한 컨트롤 허브 포함)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존 경찰 현장에서 운용되는 무선 통신장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하고, 현장 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소형·경량화 설계 적용 필요 ※ 도시 지역에서 음성, 데이터, 영상 서비스 등의 연결성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단말 및 데이터 수준 연구 ※ 테러 및 재난 등 극한의 상황 이외의 일반 치안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보급형 통신 단말과 구분하여 설계 필요 - 상용 스마트 기기(스마트폰, 태블릿) 기반의 안전 현장 가시화 서비스 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△재난환경에서의 실내/외 하이브리드(GPS, BLE, 와이파이, UWB 등) 정밀 측위 및 위치추정 기술, △음성, 이미지, 동영상, 메시지 등을 통한 현장 인식 정보 공유 기술, △피아 측위 결과 및 현장 영상을 작전 상황도에 전시하여 가시화 기술 포함 필요 ※ 현장 요원-현장 요원 간, 현장 요원-지휘·관제소 간, 현장 요원-무인기(드론, 로봇 등)간 직관적인 소통 방안 제시 필요 ※ 안전 현장 요원 이외의 일반 국민이 사용가능한 상용화 서비스 개발 고려 필요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 현장 지휘·관제 시스템 지능화 및 이동형 지휘·관제·통신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간정보 기반 유관기관 자산 및 대응 현황 공유가 가능한 합동상황 관리 체계 개발 구조 설계 - 안전 현장 가시화 서비스를 통해 ‘보이는 현장’을 자동으로 인식하고, 적절한 자원활용 방안 추천하는 등 지휘자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지휘·관제 시스템 지능화 기술개발 구조 설계 - 작전 범위 확장과 임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이동형 지휘·관제·통신 시스템 개발 구조 설계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○ 안전 현장 가시화 기술 개발 로드맵 도출 및 활용 방안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요소 기술 단계별 확보 계획(기간) 및 예산 - 성능목표 등 핵심기술별 연차별/최종 평가 기준(안) 마련 - 협력 부처 발굴 및 대규모 R&D 추진 방안 제시 - 기술 적용 시나리오(범위) 및 활용전략 제시 - 최종성과물 활용 시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개발 이후 성과물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방안 포함
연구 추진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사 기술, 제품 등에 대한 문헌조사 ○ 산·학·연·경 전문가 지문·인터뷰 등을 통해 기술수요·주요이슈 및 쟁점 분석 ○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자료 및 연구 내용 상시 공유 ○ 요소기술별 개발 전·후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연구 ○ 테러·재난현장 가시화 기술은 상이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·복합되어야 하므로 컨소시엄 구성·추진 추천
연구비 및 연구기간	95백만원 / 2025. 8월 ~ 2026. 1월 (6개월)
기타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(협조)하여 연구추진 ○ 연구종료 후 ‘26. 2월 ~ ‘26. 5월 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 필수

첨부 2

지역산업 연계 K-치안 혁신밸리 조성방안 연구

		RFP 번호	유형①-2
과제명	지역산업 연계 K-치안 혁신밸리 조성방안 연구		
과제담당관	미래치안정책과	담당자	임현진 경위
선정방식	지정공모형		
연구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K-치안 전략 핵심기술 개발 ○ 치안벤처혁신센터 구축·운동을 통한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		
연구 내용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-치안 산업 생태계 현황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·내외 치안산업 정책·제도 및 시장 동향·전망 분석 - 국내 지자체별 보유한 클러스터·인프라 진단 및 관계부처(과기부, 산업부, 중기부 등) 지역혁신사업 현황 분석 - 그 간 경찰청 기술사업화 추진 성과 및 한계 분석 → 공백영역 발굴 ○ K-치안 혁신밸리 조성 지원·운영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부처 클러스터 연계·협력 방안 및 기존 경찰청 기술사업화 사업과의 차별점 전략 및 연계방안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경찰청 기존사업과 연계된 K-치안 산업 생태계 조성(안) 도식화 - K-치안 신산업 밸리 조성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(예산, 과제수, 기간) 산정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 필요성 제시 - 사업추진체계(총괄과제 및 컨소시엄 구성(안) 등) 제시 - 경찰청-관계부처-지자체의 기능·역할과 다자 간 전략적 협업 체계 구축 ○ 산업클러스터 연계 치안 R&D 고도화 방안 연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찰청 수요 기반 전략핵심기술 분야 발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미래비전 2050, 과학치안 기술로드맵 등 반영 및 경찰청 공청회 추진 - 전략핵심기술 분야와 연계가능한 지자체·산업클러스터 후보군 도출 - 연차별/단계별 세부 목표 설정 및 지원내용 구성 ○ 치안벤처혁신센터 구축·운영 방안 연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안벤처혁신센터 업무 범위, 역할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- 치안벤처혁신센터 지원규모(예산, 인력 등) 산정 		
연구 추진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·학·연·경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·운영 ○ 유사 사업에 대한 비교·분석 토대로 본 사업의 차별성 확보 ○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자료 및 연구내용 상시 공유 ○ 지자체 및 산업클러스터 대상 간담회, 공청회 등 의견수렴 진행 		
연구비 및 연구기간	75백만원 / 2025. 8월 ~ 2026. 1월 (6개월)		
기타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(협조)하여 연구추진 ○ 연구종료 후 '26. 2월 ~ '26. 5월 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 필수 		

첨부 3

고위험 운전자 주행안전 기술 및 교통약자 보행 안전 기술 확보 방안 연구

		RFP 번호	유형①-3
과제명	고위험 운전자 주행안전 기술 및 교통약자 보행 안전 기술 확보 방안 연구		
과제담당관	미래치안정책과	담당자	임현진 경위
선정방식	지정공모형		
연구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첨단 교통안전기술 개발을 통한 교통약자 대응 안전 체계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고령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 시스템 개발 방안 마련 -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늘어나는 고위험 운전자의 “이동권”은 보장 하되 “안전권”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 방안 마련 		
연구 내용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위험 운전자 주행안전 기술 및 교통약자 보호 기술 관련 동향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정책·제도 및 시장 동향·전망 분석 -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(기술수준, 특허·논문동향 등)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 기술 동향의 한계점 도출 및 이후 본 연구추진 방향과의 차별성 제시 - 既추진 유사사업·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도출 - 기술 확보 당위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분석 - 국산화, 기술 확보에 따른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○ 고위험 운전자 주행안전 시스템 확보를 위한 연구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기술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향(안) 연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조건부 운전면허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고도화 방안 마련 필요 - ‘이용자’ 단위의 마이크로 운전 정보 수집 및 운전자 맞춤형 운전 능력 분석/예측 시스템, 고위험 운전자 대상 빅데이터 분석 기반 운전면허 의학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면허 관리 체계,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장치를 개발하여, 향후 적성 검사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, 운전자 신체 기능 변화 등에 기반한 운전 능력 분석 및 표준화 등을 통한 운전자 맞춤형 운전 능력 예측 시스템 등 포함 ※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고위험 질환 및 상태 분석, 면허 발급 관련 의학적 평가 방법 도출, 면허 발급을 위한 운전 반응 기준치 및 평가 방법 고도화 등 포함 - 고위험 운전자 유형별 맞춤형 안전운전 보조/사고 대응 기술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고위험 운전자 유형별·등급별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기술개발 및 설치 기준 등 마련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○ 첨단 기술에 기반한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한 연구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기술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향(안) 연구 - 인공지능, 로봇, UAM 등 첨단기술 편제화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안전 기술 확보 방안을 다학제적으로 연구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위험 운전자 주행 안전 기술 및 교통약자 보행 안전 기술 개발 로드맵 도출 및 활용 방안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요소 기술 단계별 확보 계획(기간) 및 예산 - 성능목표 등 핵심기술별 연차별/최종 평가 기준(안) 마련 - 기술 적용 시나리오(범위) 및 활용전략 제시 - 다부처 협력 방안 제시 - 최종성과물 활용 시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개발 이후 성과물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방안, 제도 개선(안) 포함
연구 추진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기술 및 교통약자 보행 안전 기술과 관련된 유사 기술, 장비 등에 대한 문헌조사 ○ 산·학·연·경 전문가 지문·인터뷰 등을 통해 기술수요·주요이슈 및 쟁점 분석 ○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자료 및 연구 내용 상시 공유 ○ 요소기술별 개발 전·후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연구
연구비 및 연구기간	80백만원 / 2025. 8월 ~ 2026. 1월 (6개월)
기타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(협조)하여 연구추진 ○ 연구종료 후 '26. 2월 ~ '26. 5월 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 필수

첨부 4

재난 및 범죄 현장 신속 신원확인 기술 확보 방안 연구

		RFP 번호	유형①-4
과제명	재난 및 범죄 현장 신속 신원확인 기술 확보 방안 연구		
과제담당관	미래치안정책과	담당자	임현진 경위
선정방식	지정공모형		
연구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중 구조 및 유량·유속 등 맵핑 DB를 구축하고,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중 투신자·실종자 투신 및 표류지점 예측 방안을 도출하고, 스마트 글라스 등 수중 가시화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수색 활동 지원 방안 마련 ○ DNA 추출·증폭, STR 프로파일링까지 전과정을 신속·자동화한 모듈 및 관련 시약·소모품의 국산화 방안을 획득하고, 국산화 장비로 구성된 이동형 실험실 개발 방안 마련 		
연구 내용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원확인 기술(수중 수색, 신속 DNA 분석 시스템 및 운영 보조장비) 관련 동향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정책·제도 및 시장 동향·전망 분석 -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(기술수준, 특허·논문동향 등)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 기술 동향의 한계점 도출 및 이후 본 연구추진 방향과의 차별성 제시 - 既추진 유사사업·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도출 - 기술 확보 당위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분석 - 국산화, 기술 확보에 따른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○ 수중 투신자·실종자 투신·표류지점 예측 및 안전한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기술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향(안) 연구 -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수중(강, 저수지, 호수) 투신·표류 예측 알고리즘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스마트 글라스 등 수중 가시화 기술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이미 구축된 수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방안 제시 ※ 수중 실종자 탐지를 위한 보조 접근으로 인간 사체 유래 부패 대사산물 및 인간 조직 특이적 단백질의 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, 간접 물질이 존재하는 오수, 우천 환경 등에서 정확도를 제고할 방안 제시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○ 신속 DNA 분석 시스템 및 운영 보조장비 국산화를 통한 이동형 실험실 구축을 위한 연구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기술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향(안) 연구 - 신속 DNA 분석(추출, 증폭, 분석 완전 자동화 통합시스템), STR 마커 패널 및 분석 알고리즘, 시약·소모품 등을 포함한 현장 이동형 신속 DNA 분석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구조 설계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○ 신원확인 기술(수중 수색, 신속 DNA 분석 시스템 및 운영 보조장비) 기술개발 로드맵 도출 및 활용 방안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도출 		

	<p>※ 요소 기술 단계별 확보 계획(기간) 및 예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능목표 등 핵심기술별 연차별/최종 평가 기준(안) 마련 - 신원확인 기술 적용 시나리오(범위) 및 활용전략 제시 - 최종성과물 활용 시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제시 <p>※ 개발 이후 성과물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방안 포함</p>
연구 추진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중 수색, 신속 DNA 분석 시스템 등 재난 및 범죄 현장 신속 신원 확인과 관련된 유사 기술, 장비 등에 대한 문헌조사 ○ 산·학·연·경 전문가 지문·인터뷰 등을 통해 기술수요·주요이슈 및 쟁점 분석 ○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자료 및 연구 내용 상시 공유 ○ 요소기술별 개발 전·후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연구 ○ 수중 수색 기술과 신속 DNA 분석 시스템 개발 기술은 상이한 기술로 컨소시엄 구성·추진 추천
연구비 및 연구기간	80백만원 / 2025. 8월 ~ 2026. 1월 (6개월)
기타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(협조)하여 연구추진 ○ 연구종료 후 '26. 2월 ~ '26. 5월 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 필수

첨부 5

사이버안보 구현을 위한 지능형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

		RFP 번호	유형①-5
과제명	사이버안보 구현을 위한 지능형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		
과제담당관	미래치안정책과	담당자	임현진 경위
선정방식	지정공모형		
연구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닉된 안보 위협 정보 해독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암호 분석 기술 및 고성능 병렬컴퓨팅을 결합한 고속 암호 크래킹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○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테러 단체의 선전·선동, 테러 예고 등 위해 요소를 AI를 활용하여 실시간 탐지·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		
연구 내용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암호 크래킹 및 기반 테러 위해요소 탐지 기술 관련 동향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·외 문제발생 사례 및 대응조치 조사 -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(기술수준, 특허·논문동향 등)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 기술동향의 한계점 도출 및 이후 본 연구 추진 방향과의 차별성 제시 - 既추진 유사사업·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도출 - 기술 확보 당위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분석 -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○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목적 암호 크래킹 기술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영어권 언어 기반 암호 데이터 해독을 위한 딥러닝·LLM 기반 암호 패턴 학습 및 암호 디셔너리 자동 생성 기술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어, 중국어(특히, 다양한 방언군(dialect groups) 포함), 일본어, 동남아시아권 언어, 아랍권 언어 등 다수 언어권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디셔너리 자동 생성 기술 필요 - 대용량 암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병렬컴퓨팅 시스템(HW/SW) 기술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GPU/FPGA/ASIC 기반 병렬처리 기술 등 암호 크래킹 속도 향상을 위한 연산 효율 최적화 및 크래킹 엔진 구조 설계 ※ 생성된 디셔너리를 병렬컴퓨팅 시스템 연산력을 통하여 복호화 대상 암호 또는 파일에 대입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- 암호 해시 역추론을 위한 기술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MD5, SHA-1, SHA-256 및 Salt, 등 다양한 보안 기법 역추론을 위한 연산 특성 고려 ※ 병렬화 저항성 등 암호대응에 대한 기술적 대응 전략 고려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○ 온라인상 테러 위협 자동 탐지 목적 멀티모달 기반 AI 기술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테러 위험도 판단을 위한 유해 콘텐츠 분류 체계 및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 수집 방안 및 학습 방법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유해 콘텐츠(예)) △테러단체 선전·선동 게시 글·영상, △테러단체 자금모집 게시글, △테러예고 글, △불법무기 제작·소지 글 등 온라인상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·영상 등 - 멀티모달 데이터(텍스트·음성·이미지·영상 등)를 활용한 AI 기반 자동 탐지 기술개발 구조 설계 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4시간 실시간 탐지 및 분석을 위한 스트리밍 기반 처리 파이프라인 설계 및 모니터링 시각화 인터페이스 설계방안 제시 ※ (시각화 인터페이스) 위협게시물 관리자 통보 및 분석 결과 확인, 상습 게시자에 대한 추적·보고 등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○ 암호 크래킹 및 멀티모달 기반 테러 위해요소 탐지 기술개발 로드맵 도출 및 활용전략 제시 -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도출 ※ 요소기술 단계별 확보 계획(기간) 및 예산 - 성능목표 등 핵심기술별 연차별/최종 평가 기준(안) 마련 - 암호 크래킹 및 테러 위해요소 탐지 기술 적용 범위 및 시나리오 기반 활용 전략 제시 ※ 예) 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 활용, 테러위협 AI 모니터링 등 - 최종성과물 활용 시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제시 ※ 개발 이후 성과물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방안과 제도개선(안) 포함
연구 추진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암호 크래킹 및 테러 위해요소 탐지 관련된 유사 기술, 장비 등에 대한 문헌조사 ○ 산·학·연·경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내외 기술수요·주요이슈 및 쟁점 분석 ○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자료 및 연구내용 상시 공유 ○ 요소기술별 개발 전·후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연구 ○ 암호 크래킹과 멀티모달 기반 테러 위해요소 탐지는 상이한 기술로 컨소시엄 구성·추진 추천
연구비 및 연구기간	75백만원 / 2025. 8월 ~ 2026. 1월 (6개월)
기타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(협조)하여 연구추진 ○ 연구종료 후 '26. 2월 ~ '26. 5월 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 필수

첨부 6

폭발물 대응을 위한 개인방호체계 국산화 방안 연구

		RFP 번호	유형①-6
과제명	폭발물 대응을 위한 개인방호체계 국산화 방안 연구		
과제담당관	미래치안정책과	담당자	임현진 경위
선정방식	지정공모형		
연구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및 화학물질 기반 폭탄 등 신종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소재·부품 개발을 통해 개인방호체계 국산화 방안 도출 ○ 방폭보호의 성능 평가기술 확보를 통한 신뢰성 검증 체계 연구 		
연구 내용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폭보호 관련 동향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·외 주요 폭발물 현황 및 개인방호체계 분석 - 국내외 정책·제도 및 시장 동향·전망 분석 -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(기술수준, 특허·논문동향 등)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 기술 동향의 한계점 도출 및 이후 본 연구추진 방향과의 차별성 제시 - 既추진 유사사업·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도출 - 개인방호체계 국산화, 방폭보호의 성능 평가기술 확보 당위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분석 - 개인방호체계 국산화, 방폭보호의 성능 평가기술 확보에 따른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○ 개인방호체계 국산화를 위한 연구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기술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향(안)* 연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재, 착용성, 경량화, 방폭성능 등 방폭보호의 관련 개선 외에도 HUD와 환경·통신시스템을 통합한 실시간 상황인식 인터페이스 개발, 실시간 사용자 생체신호 분석을 통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 - 대응가능한 폭발물 종류(안)* 및 방폭보호의 소재, 공법 등 기술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뢰 형태가 아닌 일반 폭발물, 드론 투하 폭발물, 화생방 폭발물 등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○ 방폭보호의 성능 평가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추진 방향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기술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향(안) 연구 - 소재, 부품, 완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개발 구조 설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NIJ 0117.01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 방폭보호의 평가기술 확보 - 기술개발 구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우선순위 도출 ○ 방폭보호의 및 평가기술 기술개발 로드맵 도출 및 활용 방안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요소 기술 단계별 확보 계획(기간) 및 예산 - 성능목표 등 핵심기술별 연차별/최종 평가 기준(안) 마련 - 방폭보호의 기술 적용 시나리오(범위) 및 활용전략 제시 - 최종성과물 활용 시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개발 이후 성과물의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방안 포함 		
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산 방폭보호의, 국내 지뢰보호의 등 방폭 관련된 유사 소재, 기술 등에 대한 문헌조사 		

추진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·학·연·경 전문가 지문·인터뷰 등을 통해 기술수요·주요이슈 및 쟁점 분석 ○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자료 및 연구 내용 상시 공유 ○ 요소기술별 개발 전·후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연구
연구비 및 연구기간	75백만원 / 2025. 8월 ~ 2026. 1월 (6개월)
기타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수행기관은 경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(협조)하여 연구추진 ○ 연구종료 후 '26. 2월 ~ '26. 5월 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완 필수